

전자카드로 바꾸는 국가중대사건인 “주민등록법 개정안”, “인감증명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3. 인권관련 최주요법률안을 졸속 통과시키고자 하는 행태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더이상 방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에 법률을 사용·수익하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이들 인권관련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통과를 절대 반대한다.

4. **영장실질심사제** 우리는 지난 8.29일 검찰출신 이건개(李健介) 의원 외 27명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인권의 침해와 국가발전의 저해가 크게 우려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애써 인내하며, 검찰과 법원의 험거루기(?) 공방을 지켜 보면서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신뢰하고 의지하였다.

하지만, 검찰출신 의원 5명의 2인으로 구성된 국회 법사위 소위가 개정안 제201조제2항(인권침해우려의 개정내용은 생략)을 수정하여 통과시킨 것은 인권을 도외시하면서 스스로 법의 권위를 손상시킨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영장실질심사제의 도입은 우리나라가 인구 10만명당 3백19명으로 연간 14만명이나 구속된다고 하는 구속왕국의 오명(汚名)에서 벗어나고 인권보장을 통한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심분발휘케 함으로서 국가발전을 도모키 위한 여야 의원이 5년간의 논의끝에 만들어낸 입법부와 사법부의 결단이었으며,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신체자유권을 더욱 확실히 하는 정부수립 이후의 가장 획기적인 선진 인권제도였다(실제로 인권과 사생활권을 무시한 소련 등 공산권은 모두 폐망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지 1년도 채 되지않아 수사의 효율성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들어 다시 국회의원들에 의해 그 의미를 퇴색시킨 것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5. **전자주민카드** 또한, 본연맹의 조사에 의하면 주민증의 전자카드화는 세계 선진국은 물론 100여개국 어느 나라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매우 위험한 정책으로서,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이를 2년간이나 몰래 추진하는 정부의 진의(眞意)가 무엇인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제안한 주민등록법 등의 개정안 국회통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법률연맹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민증의 전자카드화가 개인정보의 통합을 통해 국가권력기관의 자의적인 사용으로 부당한 국민통제를 가능케 하며, 3천 4백만 전 국민의 신상정보가 해커나 내부관리자 등에 의해 적성국이나 외국의 대기업에 유출되므로서 국가안보, 국가경제 등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될 뿐 아니라, 사생활정보의 유출로 인해 이한영, 지존파 사건등과 같이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과 주민전산망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작업 없이 「민생법안의 국회처리」는 도외시한 채 인권침해와 국가발전 저해의 우려가 큰 법안의 졸속통과는 있어서는 안된다.

정보화는 꼭 달성되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그러나 정보화가 개인정보의 통합과 전자카드화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우리 법률연맹이 세계 100개국의 신분제도 실태를 조사한 바로는 미,영,불,독 등 선진국은 전산능력이 10배 이상의 수준에 있지만 전산정보의 유출에 대한 완전한 대안은 영구히 없다는 사실과 국민적 반대 등으로 신분증을 전자카드화한 나라는 한곳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부의 환상적인 편리성 주장만을 쫓아 1조억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면서 주민카드를 시행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이제부터라도 “행정실명제” “법안추진자의 책임”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6. 우리 법률소비자연맹은, 이에 다시금 국회가 이들 인권관련 주요법안을 당리당락을 위한 정당간의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국가존립의 주요이유인 사생활 보호와 인권보장의 관점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 법안들을 폐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997년 11월 14일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金大忍

인원 자료실		
등록인	인원자료	자료
198		
5/12	B47	34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제주공동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1997. 4. 8(화) 오전 10시 제주범도민회 사무실)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에 대하여

1. 명 칭

『행정안전부 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약칭 :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제주공동대위)

2. 목 표

- 전자주민카드제의 제주지역 시범시행계획 철회를 위해 노력한다.
-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필요성과 이득 위한 각종 제도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3. 참가단체

-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 제주경제성실천시민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종교인협의회
제주YMCA, 제주YWCA, 한미가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도인 시대년주주마제주연대, 푸른시시리이 서원도, 홍익연제주도연구(아침 10개민생, 가나아날)

4. 조직체계

대표자회의 (공동대표회의)
(성임 공동대표)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사무국

단말기
"신앙관 만조"

5. 상임공동대표

- 최병모(변호사), 고종석(제주대 교수), 김성근(갈릴리교회 목사)

6. 집행위원장

- 문용호(범도민회 사무처장)

7. 사무실

(000-000)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175-7번지(3층) 제주범도민회 사무실

전화 (064)53-0844, 22-8789 / 팩스 22-8789 / 통신폭 (전)bdh94 (하)bdh96

4/9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제주공대위 사업계획

1. 사업의 의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전자주민카드는 국민사생활을 침해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반드시 막아내야 할 제도이다. 특히 제주에서의 전자주민카드 반대활동과 탄압기부 운동은 앞으로 전자주민카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느냐, 않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따라서 전자주민카드시행반대 싸움은 '평화의 섬' 제주를 '빅브라더'의 명령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며, 국민기본권을 지키는 것이요, 프라이버시권 확보에 대한 국민인식을 넓히는 것이다.

2. 사업의 목표

- 통합전자주민카드의 제주지역 시범시행계획 철회를 위해 노력한다.
-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각종 제도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3. 주요사업

1) 제주지역 공대위 결성 기자회견

- 일시 : 4월 8일 오전 10시
- 장소 : 제주법도민회 사무실
- 내용 : 공대위 결성 공보/조서 및 사업계획안 발표

2) 교육(홍보)자료집 발간

- 취지 : 최근 제주도 당국은 「정보화시대의 '주민카드'는 이렇습느냐」라는 제목의 홍보자료 5천부를 제작해 각 시군에 배포하였고 각 읍면동사무실에도 비치할 예정이라 한다. 반면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언론을 통하여 제기되기는 했으나 충분히 홍보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을 전 도민에게 알리고, 도 당국이 제작한 자료에 대한 체계적 내용이 필요하다.

- 목적 : 본격적 반대투쟁 돌입에 앞서 사안에 대한 충분한 공유가 필요하고, 이후 도민 대중들에게 문제점을 홍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 형식 : 전국공대위와 공동으로 자료집 2천부를 발간한다(4월 11일경 발간 예정)

3) 심포시움

- 명칭 :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과 프라이버시권 보호"

- 부제 :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4월 26일(금:정보통신의 날) 오후 3시

- 장소 : 이동통신 강당 혹은 도정대강당(미정) 상상회의실

- 주제발표 : 김기중 변호사(민변)

- 토론사회 : 고호성(제주대법학과 교수)

- 토론자 : 박완순(변호사/참여연대사무국장), 국회의원, 도 내부국장, 이영길(노의원)

제주공대위 상임대표 중 1인)

- 주관 : 제주지역 공대위
- 후원 : 전국 공대위

4) 교육/홍보사업

- 홍보사업 : 리플렛/유인물/자료집 등
- 교육사업 : 난제 및 학교 강연 및 대자보
- 신문투고 : 지방일간지 독자투고 및 기고/중앙일간지 기고/중앙시사주간지 기고
- 전자메일을 이용한 홍보/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홍보

5) 지역 여론추도출 반대 1천인(5백인) 선언

- 방식 : 도내 일간지 5년 동광고
- 일사 : 5월 중

6) 연대사업

- 지방의회와의 연대사업 : 향후 시행계획상 정보공개청구와 지방의회 감사권 활용
- 전국 공대위와의 연대사업
- 전국적 조직망을 통한 연대(지역운동네트워크/전국연합/경실련/여연 등)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제연대 운동 : 인터넷 혹은 국제심포지움

7) 투쟁기획사업

- 항의방문 및 시위
- 반대시명 및 등록거부 운동
- 헌법소원 운동

5월 초부터 대안 홍보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에 대한 홍보자료집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사회의 도래'

- ◆ 발행처 :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
- ◆ 발행일 : 97년 4월 16일
- ◆ 크 기 : 50쪽, 4×6판 핸드북

< 주 요 내 용 >

●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면 이렇게 됩니다

● 이렇게 합니다.

- ▶ 내무부, 정보통신부, 안전기획부, 경찰청에 항의전화=를 합니다.
- ▶ 1998. 10.부터 발급하기 시작하는 전자주민카드의 발급을 거부합니다.
- ▶ 신분증명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 ▶ 프라이버시보호법의 제정을 주장합니다.
- ▶ 전자주민카드 대책위원회에 후원금을 냅니다.

● 자료집을 내며 : 김진균 (공대위 공동대표, 지식인연대 대표)

● 전자주민카드는 이런 것이다.

- 모든 개인정보가 통합된다. ●경과와 시행일정
- 제주도 시범 실시 계획과 일정 ●예산내역
- 무엇이 변하는가

●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전자주민카드가 초래할 문제점들

- 지금도 당신의 비밀은 공개되고 있다. : 개인정보유출의 문제, 허약한 국가전산망
- 피해는 더욱 확대된다. : 개인정보 통합에 따른 정보유출의 피해
- 정부가 당신을 감시한다. : 근거법도 없는 예산 전용, 프라이버시권 침해
- 엄청난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나
- 불편은 여전하다.

● 모든 문제는 후진적인 주민등록증 제도때문이다.

- 주민등록증제도는 3류사회의 신분증명제도이다.
- 모든 개인정보유출의 문제는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이다.
- 주민등록제도는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다.

- 프랑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필리핀 사례

● 공대위는 이렇게 주장한다.

● 부록 : 전자주민카드 10문 10답

호 : 1/34 입력일 : 97/04/16 10:44:55 자료량 :17줄
제 목 : [무공침] "의문점 해소"에 "부당성 지적"맞서

○...濟州道는 오는 19일 제주시청 대강당에서 주민카드 사업도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재야단체에서도 별도로 26일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어서 혼선.

安大榮 道내무국장은 "주민카드의 편리성보다 역기능만 부각돼 오해를 낳고 있다"며 "내무부 주민카드 추진기획단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각계의 토론을 거쳐 의문점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

이에대해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 상공회의소에서 통합전주주민카드 행과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전자주민카드의 부당성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언급. <<끝>>

호 : 3/34 입력일 : 97/04/15 11:31:15 자료량 :25줄
제 목 : [濟州道] 전자주민카드 설명회

내년6월 제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전면 시범 실시될 (전자)주민카드를 놓고 도민들 사이에서 찬반 양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濟州道와 내무부가 도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濟州道는 "오는 19일 내무부와 道 공동주관으로 오전10시 도청 대강당에서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도민설명회를 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道는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카드 도입 필요성 및 실효성등주민카드의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동안 노출된 쟁점사항에 대한 자유스런 찬반 토론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채용 내무부 주민과장과 최종욱(상명대) 원동호교수(성균관대)가 주제발표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된다.

道가 내무부와 합동으로 도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주민카드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낮고 반대여론이 갈수록 확산됨에따라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반대 여론을 조기에 진화,예정된일정을 무리 없이 추진하려는 정면돌파의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李在鴻기자> <<끝>>

행 일 : 97/04/15

8번호 : 238/2147 입력일 : 97/04/08 12:14:20 자료량 :21줄
제 목 : [사회] 시범 전자주민카드 반대 확산

내년 4월 제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통합전자주민카드제도에 대한 반대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가 내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최병모 고충석 상근)」가 8일 오전 10시제주법도민회 사무실에서 결성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지역 공대위는 이날 결성선언문을 통해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합법령을 제정하라"며 "제주도와 도의회등은 제주도의 시범시행계획을 철회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지역 공대위의 참가단체는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법도민회,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여민회,제주종교인협의회,제주YMCA,제주YWCA,통일새대민주주의제주연대,홍사단,푸른이어도의 람들등 10개 단체다.<<끝>>

행 일 : 97/04/08

호 : 6/34 입력일 : 97/04/08 12:16:36 자료량 :16줄
제 목 : [무공침] 여러가지 문제 제기에 곤혹

○...내년 4월 전자주민카드 시범시행을 앞둔 제주시관계자들은최근 전자주민카드에 실시에 따른 사생활침해 소지 등 여러 가지문제가 제기되면서 곤혹스런 표정.

7일 도의 한관계자는 "주민들이 주민카드의 효용성과 편의보다는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사생활 침해와 국가정보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 같다"면서도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대책"이라고 강변.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자동차 사고나 건물이 무너지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니까 하지 말자는 애기와 다르게 뭐냐"고 반문,국민기본권인 인권문제를 엉뚱하게 건설현장과 비유. <<끝>>

행 일 : 97/04/08

번호 : 7/34

입력일 : 97/04/08 12:16:36

자료량 :29줄

목 : [제주도] 전자주민카드 억지홍보 물의

내년 4월 전자주민카드 시행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사실과 다른 시행홍보에 나서 말썽이 되고 있다.

제주도당국이 홍보책자를 통해,선진 여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사례를 들어 '주민을 호도하려는것이 아니냐' 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제주도는 최근 '정보화 시대의 주민카드는 이렇습니다' 란 홍보책자를 통해 전자주민카드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프랑스·독일·스페인 등에서 마치 전국민이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하고 있는것처럼 사례를 들고 있다.

이들 세나라가 지난 95년부터 사회보장카드 또는 건강카드란이름으로 전국민을 대상의 전자주민카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사례로 든 프랑스의 경우는 <지난 79년 당시 의료카드와같은 종이신분증을 전자카드로 대체하려던 계획이 테랑정부 당시 사생활 침해이유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스페인 역시 <전국민 고유번호가 부여되는 주민등록과 같은 제도는 프랑코총통 사후 폐지 됐고,지문제도마 이미 5년전에 사라진 것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국가 고유번호가 부여되는 전자주민카드제도는 국민기본권보장을 위해 하지못하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제주도당국은 이에대해 "내무부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확인 된 것은 아니 " 라고 해명하고 있다.<高弘哲기자> <<끝>>

행 일 : 97/04/08

번호 : 11/34

입력일 : 97/04/05 12:32:37

자료량 :16줄

목 : [무공침] 전자주민카드 홍보에 부심

○...濟州道는 주민카드가 시행도 되기전에 각계로부터 불신을받음에 따라 학계와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갖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

濟州道는 주민카드를 홍보하는 책자를 만들어 도입취지 및 필요성,편리성,사생활 보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의무단이용에 대해서는 "정보의 불법유출은 불가능하다" 고 밝히고 있으나 설득력이 약한 실정.

이에 대해 許大璿 道자치행정과장은 "오는 5월초 내무부 추진기획단과 합동으로 도민 공청회를 열어 의구심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 고 설명. <<끝>>

행 일 : 97/04/05

번호 : 13/34

입력일 : 97/03/29 13:08:46

자료량 :24줄

목 : [전자주민카드] 철회요구 확산

내년 4월 제주도 전역에서 시범 실시될 전자주민카드에 대해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총력 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제주범도민회를 비롯한 도내 7개 시민 종교 사회단체 대표자는27일 가칭 '통합전자주민카드 시범시행반대와 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결성을 위한 모임을 갖고 4월초 공동대책위를 출범시키는데 합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전자주민카드에 대해 정부는 경제적 효율성과 행정편의를 강조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에 따 않게 되는 것은 사생활을 비롯한 국민 기본권 뿐" 이라며 "세계적 비웃음거리가 될 주민카드 시범실시는 철회돼야 한다" 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대표자들은 4월초 공동대책위 결성과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또는 전국공동대책위와 연대, 국 규모의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반(反)인권적 통합전자주민카드 반대 범도민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는 한편,제주지역 대표하는 1천인 선언을 이끌어 내 전자주민카드의 시범실시를 철회토록 할방침이다. <이재홍기자> <<끝>>

행 일 : 97/03/29

호 : 15/34

입력일 : 97/03/25 12:08:32

자료량 :32줄

목 : [시민사회단체] 제주 시행 전자주민카드 반대 여론 '붐물'

내년 4월 제주도를 시범지역으로 시행하는 통합전자주민카드제도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있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진균·김창국)는 최근 내무부가 입법예고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의견서에서 "전자주민카드시스템은 전국의 유·무선통신망으로 구성되는 대규모의 국가전산 시스템이라고 전제, "증명통합과 정보통합을 가져 오는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정부가 입법예고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의 규율대상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자주민카드는 개인적 사항이 대부분 수록,분실 도난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과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고 "국가전산망 전체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유출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별도의 통합입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전자주민카드제도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상호이용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히고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어떤 명목으로도 도입될수 없는 제도이므로 내무부의 입예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언론위원회, YMC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교수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연등 16개단체가 참여하고 있다.<高弘哲기자> <<끝>>

발행일 : 97/03/25

호 : 17/34 입력일 : 97/03/19 16:00:48 자료량 : 50줄
제 목 : [여론광장] 주민카드와 '빅브라더'의 망령

정부는 지난 2월, 전자주민카드를 제주지역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초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시행한 후 1999년에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보도가 나온 이후 지역의 반응은 무관심에 가깝다. 주민등록증을 1년동안 항상 소지해 온 경험때문인지, 오히려 각종 민원서류를 손쉽게 댈 수 있다는 정부의 효율성 선전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모습마저 보인다.

반면 세계 각국의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들은 현재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연 전민에게 강제로 부여하는 전자신분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것인가에, 특히 그 시범 실시 지역인 제주도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7가지 41개 항목의 개인신상정보를 하나의 IC 칩속에 담은 전자주민카드 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 세계 최초의 시도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나라처럼 권위주의 잔재가 남아 있는 후진국들은 그러한 카드를 시행할 기술이나 돈이 없어서 못하고, 우리나라처럼 정보기술을 보유한 선진국들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민의식과 제도 철저하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80년대 말 전국민 신분증제도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국제프라이버시 옹호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미국에서도 60년대 이래 여러 차례 보편적 신분증제도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각종 인권단체의 광범위한 저항 때문에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90년에 EC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안을 상정하였고, 우리나라가 최근 가입한 OECD도 82년에 이미 정부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함에도 한국정부는 오히려 '세계 최초의 시도' 라고 자랑스레 주장하며 그 경제적 효용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 이다. 밥을 먹고 버스를 타고 전화를 걸고 돈을 찾고 호텔에 투숙하고 공서를 이용하는 등의 모든 행적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다니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자주민카드를 갖고 다니는 것은 IC칩을 피부나 이마에 이식하고 다니는 것이나 다름없다. 굳이 조지오웰의 '1984년' 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만약 전산화되고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무한통제 능력이 있는 전자주민카드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전주의 정권이 장악하게 되는 경우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 제도의 시행은 우리들 자신도 민주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사회의 전분야에 걸쳐 합리적인 이성 이 지배하게 이후에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시행을 막아야 하며, 발급을 거부하는 불복종운동을 전 도민이 전개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이 제도가 평화의 섬 제주에서 최초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제주의 이미지가 '빅브라더' 전제주의 국가도시로 각인됐을 때 어느 외국인이 제주를 찾아오겠는가? 제주도 및 도의회에 문 를 보는 시각의 발상 전환을 촉구한다.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집행위원장 이지훈> <<끝>>

발행일 : 97/03/19

호 : 19/34 입력일 : 97/03/19 12:33:51 자료량 : 74줄
제 목 :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3> 법적 추진과정 문제없나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될 계획으로 있는 통합전자주민카드는 헌법정신에 충실한 것인가.또한 절차상의 하
는 없는 것인가.

전자주민카드가 과연 법적근거를 확보한 것이며,국민적 합의를이룬 사업이냐가 또하나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통합 수록한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은 보호 받아야할국민 기본권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헌법(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사생활
부당한 공개로부터의 자유,이른바 '프라이버시 보호' 를 국민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 있어 이같은 프라이버시권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정보에 대한자기결정권으로서 선진 여러나라가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1973년 스웨덴이 '데이터 법' 이란 프라이버시 보호법 제정을시작으로 유럽 각국이 정보와 관련된 법제정을 서
두러 왔다.

특히 선진국들의 모임체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나름대로의 지침을 설정,세계각
국에 이를 권고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비밀정보금지·분명한 수집목적·정보주체의 동의·정보공여 거부권리·합법적인 정
수집·자기정보열람권 등 6개 권고안이 그것이다.

지난해 OECD에 가입한 우리정부는 전자주민카드가 OECD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의 시각은 정부의 그것과 다르다.

전자주민카드 반대 공동대책위는 기존 주민등록법은 물론 새롭게 시행하려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OECD권고안
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정보주체의 선택적인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민등록법은 개인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즉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정보수집 조항과 정보공여 거부권을 전
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동대책위는 또 전자주민카드의 정보주체인 주민동의와 관련, '주민등록사항이나 운전면허 시험응시원서,의료보험
가입신청서를작성하면서 이미 동의한 사항' 이라는 정부측의 주장에 대해서도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의 실시를 위해 임의로 개인의 정보를 타기관에공여한다면,정보수집 목적에 맞게 정보가 이용되었
고 볼 수 없으며,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란 주장이다.

공동대책위는 특히 "정부의 통합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법,도로교통법,의료보험법 등 기존 법률의 형태를 그대로
지하고 서식및 발급절차의 개정만으로 이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며 "이같은 발상은 정보수집이전에 법규제
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OECD 권고조항을 위배한 것" 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이른바 '정보의 바다' 에 던져지는 전자주민카드제도.

전문가들은 "전자주민카드를 갖고 다니는 것은 전자칩(IC)을피부나 이마에 이식하고 다니는 것과 다를 없다"
고 말한다.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자주민카드가 성경 속의 바코드처럼 자칫 엄청난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고 우려
고 있다.국민개개인의 단순한 정보일지라도,일단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원상태로 되돌리는것이 불가능하기 때
이다.

더더욱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의 침해소지를 담고,기본적인주민동의 절차마저 소홀히 한채 시행되는 전자주
카드.실험실의원쥐와 같은 우리를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전세계 초유로 추진되는 '전자 물모트(물모트=실험용 원쥐)' 실험에 지구촌의 시선들이 제주로 쏠리고 있는 것
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美상원의원이었던 샘 어빈은 "개인의 정보를 조금씩 양보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유를포기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한 개인의 권리장전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
함을 경고함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담보로한 '전자 물모트' 실험에 앞서,국민적합의와 동의도출이 전제돼야 한다.최소한 실험대에
올라 있는 제주도만이라도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을 사안이다. <高弘哲기자> <<끝>>

행 일 : 97/03/19

호 : 21/34

입력일 : 97/03/18 12:43:05

자료량 :76줄

목 : [전자주민카드 무엇인 문제인가] 개인정보보호 믿을수 있나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추진에 따른 또 하나의 우려는 역기능에 대한 보완대책이 무엇이냐는 것과,과연
을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전자주민카드는 정부의 말대로 편리한 점이 없지는 않다.그러나 위험 또한 상존하고 있다.전산망에 개인정보가
중 수록됨으로써 사생활의 국가 감시와 통제,이로인한 국민기본권 침해,그리고 제3자로부터의 악용소지 등 부작용
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우선 전자주민카드 시행으로 각종 개인정보가 통합되면 해킹에의한 정보유출 우려가 없지 않다.정보관리 내부의

관리소홀 또는공모에 의한 정보유출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그런가 하면 전산정보화에 대한 국민의식수준이 과연 이를 수용할 수 있는나하는 것과 함께,통합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쪽에서의 정략적 이용소재 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내무부와 시범지역인 濟州道 당국은 나름대로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한다.

전자주민카드는 그 발급센터가 현재의 주민등록 전산망에 통합증명의 자격에 관한 사항만을 추가 수록한 것에 나지 않는다는것이다.기존의 주민증제도에 여러기능을 보완한 국민편의와 복지증진의 제도로,통제수단은 아니란 얘기다.

그리고 사생활 및 인권침해소지와 관련,카드에 주민 개인별 비밀번호를 수록해 분실카드에 대한 악용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한다.그리고 반도체 공장에서 전산카드에 들어가는 전자칩을 생산할 때부터 보안관리 및 잠금장치를 설치,카드의 위조 변조를 사전예방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주민카드 전산망은 공중전산망과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커 등의 침입이 불가능,개인정보의 무단 이용은 있을 수 없다고 강변한다.그야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겠느냐' 는 얘기다.

과연 이같은 정부 당국의 보완대책은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인가.

정부당국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시행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첫째,감시와 통제의 목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감시와통제의 목적이 없다면 보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있는 사람이 사업추진기획단에 참석해야지 안기부 대공담당자가 왜 참여하고 있는가.개인고유번호까지 도입된다면 전자주민카드는 그야말로 21세기형 감시통제 장치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둘째,정보가 주전산기에 모여 있지 않으면 집중화가 아니라는정부의 주장은 이해부족이다.정보집중은 주전산에 정보가 다모여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많은 정보가 서로 교류되고 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그리고사업계획에는 전자주민카드 실시 이후 금융자산정보 등 신용정보까지 통합할 계획 수립하고 있다.그렇게되면 정보의 집중은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세째,해킹에 의한 정보유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설령 보안장치가 완벽하다 해도 정보의 유출은 해킹 뿐 아니라 정보의 관리자들에 의해 오히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의 이같은 문제점은 국회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가있다.

국민회의 소속 秋美愛의원 등은 전자주민카드 시행시 감시·통제의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며 정보유출로 인한 사생활·인권침해는 불문가지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를테면 권력의 집중은 정보의 집중을 가져오며 정보의 집중은 권력을 더욱 집중시키고 강화시킨다.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는 이미 국민에 대한 감시·통제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나다름 없다.오히려 모든 국민을 잠재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제반 서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없애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사실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란 당장의 현실에서만 족할 뿐,지구상에 완벽한 보안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일례로 내 유수의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개발한 컴퓨터 상품이 '향후 10년간은 보안이 완벽하다' 는 호언과 달리 1년 만에 안돼 20대 초반의 해커에의해 암호시스템이 무너졌다.10대소년이 어마어마한 보안장치를 자랑하는 국가기관의 전산망을 파고 든 것 또한 비슷한 예이다.

특히 정보유출은 보안체제의 허술에서만 비롯되지도 않는다.뇌물과 연고에 약한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인식의 부재가 정보유출을 가져 오기도 한다.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했던 李한영씨 피살사건에서 보,개인의 신상정보가 경찰전산망을 통해 그것도 공무원에 의해 유출된 것등은 통합신분증인 전자주민카드 시행과 관련,시사하는 바가 크다. <高弘哲기자> <<끝>>

발 행 일 : 97/03/18

번호 : 23/34

입력일 : 97/03/17 13:53:13

자료량 :79줄

제 목 :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편의나 형정편의나

내년 4월 전자주민카드제 濟州 첫 시행을 앞두고 세계의 이목이집중되고 있다.전자신분증 제도인 이제도가 지구촌에선 대한민국이,그리고 濟州지역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쏟아지는 지구촌의 시선이 결코 러운 시선들은 아니다.전자신분증 도입에 따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우려하고 있음에서다.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신분증,전자주민카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시리즈로 엮어 본다.< 편집자 注 >

전면허증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하나만 가지면 언제 어디서든 각종 증명을 대신 할 수 있다는 전자주민카드.

이른바 「꿈의 카드」라 부르고 있는 전자주민카드는 정부의말대로 과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주민편리제도가. 전자주민카드 시행과 관련,정부는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새로운제도라고 말한다.

즉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증명이나 카드발급은 인적사항이동일 하다.자격사항만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도로 발급 관리되고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이로 인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

전자주민카드는 이같은 문제를 일거에 해소 할 수 있는 다기능증명서라고 정부측은 설명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서 등 7개 주요기능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원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선진제도의 도입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대한 사회단체와 야당의 목소리는 다르다.

지난 7일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시행과 관련,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회의 소속 秋美愛·鄭均桓의원등은 “전세계를 통틀어 전국민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장을 찍어 관
리, 통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하고 “이는 우리나라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해서는 가
낙후한 국가임을 의미하며 행정력의 낭비와 국민의 불편함은 바로 이같은 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목소
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있는 인권옹호 단체들이 전국민 신분증제도 그 자체가 전체주의 산
로서 시대역행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제도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같은 맥락에서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반대의목청을 높이고 있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란 긴 이름의 단체는 전
주민카드 시행이 국민편의 보다는 행정편의, 주민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반론을제기하고 있다.

국민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사회의 불필요하게 많고 복잡한 신분증명제도 자체에 있다. 이미
정체신위에서도 인감, 등·초본 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구태여 이를 전자주민카드에 담
을 이유가 없다는 것 등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이 제도시행을 강력반대하는 것은 전자주민카드가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침해」 소지
크기 때문이다. 통합신분증이나 다름없는 전자카드의 속성상 편리속에 위협이상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화과학 발행인인 중앙대 강내회교수는 전자주민카드를 「전자감옥」에 비유하고 있다. 국가가 개인정보를 제
로 보호하고있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의 각종 정보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망에 놓여지는 것은 자동적으
로 개인이 감시당하고 통제당하는, 이른바 「전자 원형감옥」에 수감되는 꼴이 된다는 얘기다.

7가지 41개항목의 개인신상 정보를 하나의 전자직접회로(IC칩) 속에 담은 첨단 통합신분증인 전자주민카드.

정부의 말대로 편리하고 돈이 덜드는 선진제도가 정작 선진제국에서는 왜 외면당하고 있는가.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지난 80년 말 전국민신분증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시행되지 못하
는 있다. 이보다 앞서 1960년대 미국에서도 여러차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권단체들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다.

선진제국들이 우리보다 더많은 정보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 기본권인 사
생활보호에 대한국민의식과 제도가 철저하기 때문이다.

결국 전자주민카드가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란 정부의 주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담보한 행정편의에 불과하다
는 사회단체 등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高弘哲기자><<끝>>

행 일 : 97/03/17

번호 : 25/34

입력일 : 97/02/25 12:31:37

자료량 : 27줄

목 : [남군] 주민등록증 분실 많다.

주민등록증 관리가 소홀하다.

이 때문에 분실에 의한 재발급신청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민등록증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
다.

24일 南濟州郡은 지난해 주민등록증 분실에 의해 읍·면사무소에 접수된 재발급 신청건수는 3천3백6건이라고 밝
혔다.

지난 95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건수 3천1백88건에 비교해 1백18건이 증가한 셈이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민원인들이 1만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소홀에 의한 불필요한 비
용지출 총액규모도 상당액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운전면허증등으로 주민등록증을 대체사용할 수 있
등 이용폭이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南郡관계자는 “관리소홀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재발급을 위해 파출소를 경유하지 않고 읍·면에서 재발급
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등 민원처리완화도 재발급 신청건수 증가원인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불필요한 비용지출방지와 99년부터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등이 통합된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될 예정임에따라 신분증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한성기자><<끝>>

행 일 : 97/02/25

번호 : 27/34

입력일 : 96/11/26 13:55:09

자료량 : 20줄

무소속 李榮吉의원의 주특기는 철저한 증거위주다. 사전에 집행부 측에 요구한 자료를 철저히 분석, 감사 당일 감사현장에서 집행부 측에 내민다.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안 나올 수가 없다.

25일 내무국과 환경국에 대한 감사에서 李의원은 「선진국형 전자주민카드」라는 집행부 측의 설명에 「어느 선국이 한국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느냐」며 사례를 조목조목 제시, 「李의원만큼 잘 알고 있질 못하다」는 사실상 백기항복을 얻어냈다.

李의원은 또 道가 98제전에 대비, 8종의 자생야생화를 도내 주요도로변에 식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제가 알기로 8종의 야생화 모두가 전국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느 꽃이 濟州의 향토종인지 말해 달라」고 요구, 「향토종은 아니다」라는 시인을 유도했다.

李의원은 환경국에 감사에서는 동서광로 지하도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 22건에 대해 일일이 확인 전화를 건 결과를 내놓고는 「주민의견이 조작된게 아니냐」고 기습질의, 집행부를 당황케 했다.<<끝>>

행 일 : 96/11/26

번호 : 28/34

입력일 : 96/11/26 13:55:09

자료량 :124줄

목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 전자주민카드는 사생활침해 우려

濟州도의회는 5일 행정감사 닷새 제를 맞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측을 출석시켜 내무국,환경국,농수산국,관문화국 소관부서 업무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의원들은 이날 감사에서 전자주민카드, 쓰레기 소각로, 불량 비료, 컨벤션센터등을 거론, 예상되는 문제점을 집중으로 따졌다.

그러나 정기회 개최가 불과 6일밖에 안 지났는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의원들 자리 이탈 현상이 점차 늘어나고, 또 일부 의원들인 경우 정책감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시간 매꾸기식 수준이하의 질문으로 일관, 행정감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있다는 지적이 의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내무위원회

○...내무국에 대한 내무위원회(위원장 金榮訓) 감사에서 무소속의 李榮吉의원은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을 집중론

李의원은 「전자주민카드를 선진국형 신분카드라고 하지만 현재 선진국에서 42가지의 정보를 담아 전면적으로 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일부 국가에서는복지,건강등 한정된 분야에만 도입하거나 대부분 중도에서 포기했」고 지적하고 「전자카드의 문제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유출,프라이버시를 침해할소지가 높다 것이다」라고 주장하며,지존과 사건과 94년 공무원들에 의해 2백94만건의 정보가 외부 유출된 사례를 제시.

오길창기자>><끝>>

행 일 : 96/11/26

호 : 29/34

입력일 : 96/08/20 14:43:46

자료량 :30줄

제 목 : 날줄씨줄 - 전자 주민카드

런던에본부를 둔 프라이버시 인 내셔널(PI)이란 단체가 있다. 정보기술 남용 에 따른 프라이버시와 인권침해를 막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90년 결성됐다고 한다.비정부·비영리 국제단체인 PI는 40여나라에 회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데,주 로 개인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막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전에는 태국과 필리핀에서 지역내 인권운동가들과 연대해 정부의 전국민 신분증제 도입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런가하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전국민 신분증 제도실시를 막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런 PI가 최근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오는 98년부터 전면 시행키로한 전자주민카드를 반대하는 청원서를 보내와 시선을 모으고 있다.

사실 전자주민카드는 정부가 「꿈의 혁명」이라고 선전할만큼 정보화시대의최 첨단 주민등록증이다.손톱크기 한 반도체 칩에 일곱가지 개인정보를 담을수 있는 이 전자카드가 선보이게 되면 동사무소에 갈 일도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주민 등록이나 인감증명을 떼는데도 동사무소까지 가지않고서 거리 곳곳에설치된 무 인발급 를 이용하면 된다.또 카드를 넣고 단추를 누르면 각종 증명서가 즉시 발 급된다. 뿐만아니라 교통법규위반 도 경찰의 휴대용 단말기에 카드만 갖다대면 3초도 안되어 경찰보관용과 본인보관용,은행납부용 스티커가 한꺼번에 쏟아진다.

그런데도 PI가 악을 쓰며 이를 반대하는 일은 간단하다. 프라이버시 침해때문 이다.정보독점으로 인한 개인 감시와 통제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높 다는 것이다.PI는 선진국도 망설이는 이 「위험한 시도」가 한국에서 저항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에 대한국민들의 인식 이 너

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보·개방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노출시키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팬티까지 벗
~주는 일이나 다름없다는 경고이다.<<끝>>

행 일 : 96/08/20

호 : 31/34

입력일 : 96/05/15 16:04:41

자료량 :15줄

목 : 무공침 - 전자주민카드 시범발급

○...98년 7월부터 본격 실시하게될 전자주민등록증카드제 실시를 앞뒤 濟州市에는 시장을 포함한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9명과 공보담당관 시민과장전산계장등 12명이 사용에 앞선 시범실시용 발급을 받아 사용중.

이 전자 주민등록증은 카드 하나만 가지면 주민증은 물론 의료보험이나운전면허 국민연금 인감증명 주민등록등·
본 지문 등의 확인을 받을수 있는 간편한 제도로, 본격 실시하게 되면 편리한 제도로 정착될 전망.

그러나 일부에선 "현행 제도상 주민등록증 발급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불가능하게 돼있어 부모의 카드를 이용하게
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있을때등의 사용편의에 따른 제도보완등이 뒤따라야 할것"이란 지적들. <<끝>>

행 일 : 96/05/15

호 : 32/34

입력일 : 96/01/23 15:48:34

자료량 :25줄

세 목 : 전자주민카드 범범자 식별기능 부여돼야

경찰력의 낭비를 막고, 민생치안을 확립하기위해선 새로 선보일 전자주민카드에 범범자를 식별할수 있는 기능부여
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내무부는 올해부터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을 추진,오는 98년까지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다목적
자카드로 대체할 계획이다.

대체될 전자카드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은 물론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운전면허증등 모
6가지의 제증명을 대신할수 있으며, 그 내용은 판독기를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전자카드가 이같이 다목적용이고 조회가 편리함에 따라 카드에 형집행 불능자나 기소중지자를 식별할수 있는 기
능을 첨가할 경우 경찰이 이들 업무수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은 파출소 직원들이 벌금징수등을 위한 형집행장 처리와 기소중지자검거에 동원됨으로써 파출소의 고유
업무인 방범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게 경찰 안팎의 지적이다.

또 벌금징수를 위해 형집행장을 남발하고 범범자에 대한 대응이 미흡, 공신력이 실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전자카드에 범범자 식별기능 부여는 당장의 기대효과도 크지만 이에따른 소프트웨어를 계속
발할 경우 경찰의 첨단 수사장비로 활용될 소지가 큰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高尙
기자> <<끝>>

발 행 일 : 96/01/23

번호 : 33/34

입력일 : 96/01/12 15:22:38

자료량 :22줄

목 : 98년부터 전자주민카드 발급, 주민등록증등 6가지 제증명 대신

98년 하반기부터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사라진다.

대신 IC 칩이 내장된 전자 주민카드가 발급, 카드한장으로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0일 濟州市에 따르면, 올해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다목적 주민카드 발급 사업을 추진, 98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자카드에는 현재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물론, 기타 다른 개인 신상명세까지 입력, 주민등록증, 주민등
록 등·초본, 인감증명,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등 여섯 가지의 제증명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민원인들은 이런 복잡한 제증명을 앞으로는 일일이 발급 받을 필요 없이 각 기관에 설치된 카드판독기를
해 신용카드를 조회하듯 한차례 조회만 거치면 모든 처리가 끝나게 된다.

市는 이를 위해 관내 19개 동사무소에 증명발급장비를 설치, 97년말까지17세 이상 전 시민에 대한 각종 자료를 입
시킨 뒤 98년 7월부터 카드를발급할 계획이다.<이재홍기자> <<끝>>

발 행 일 : 96/01/12

호 : 34/34

입력일 : 95/12/18 15:52:05

자료량 :29줄

제 목 : 주민등록증 경신사업 본격 추진, 98년까지 전자주민카드 발급 완료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濟州道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증은 지난83년 일제경신된후 12년이 경과, 위조나 변조가 쉬워 각종 범법행위에 악
·되는가 하면 단순 신분확인기능에 국한돼 내무부에서 일제경신키로 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청이나 은행·행정쇄신위원회등에서국가안보 및 치안·금융실명제유지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주
·등록증 일제경진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지난 3월 주민등록증경신 기본계획을 확정, 5월에는합동 추진 기획단을 설치하는 한편 전자주
·민카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어 내년부터 오는 98년까지 국비 9백15억원과 지방비 8백90억, 기타 9백30억등 총2천7백35억원을 들여 전자주민
·카드 제조·발급을 완료한다.

내년의 경우 일선 시·군에서는 586 퍼스널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개읍·면·동당 4백45만원씩 예산을
·성, 전국적으로 3개년동안 8백90억원의 지방비가 투입된다.

내무부는 이달말까지 전산망·증 제조발급업자을 선정한뒤 내년에는 발급센터, 97년에는 자료및 전산망을 구축한

·이어 97년 10월부터 98년 6월까지 구 주민등록증을 회수, 새 전자카드를 교부한다.

전자카드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국민연금증등 4개증과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등 2개
·증명서의 업무가 통합된다.

주민등록경신 합동추진기획단에서는 증의 명칭및 카드수록정보처리, 카드분실대책, 카드 위·변조방지방안등을 마
·련하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은 지난 6월말현재 17세이상 3천3백93만4천명으로 전국민의 74.4%에 이르는 것으로 집
·되고 있다.

<<끝>>

발 행 일 : 95/12/18

	부서	일
	B4-1	70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1998. 12. 10.

수신자 참여단체 담당자

발신자 김기중(전화 : 567-2316, 팩스 : 568-3439)

제목 현재 상황 보고와 활동방향논의

1. 오랜 기간동안 별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관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별 다르게 활동할만한 시
점이 없었고 그대로 두어도 석전할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1. 전자주민카드문제의 송집은 주민등록법 재개정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이번 상기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전자주민카드를 완전히 포기하는 형태로 개정되는 문제가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지난 12월 8일에 일제히 보도된 '전자주민카드 백지화' 기사는 오보였으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1. 지난 11일 초경 주민등록법 재개정안을 조문대대표까지 만들어서 추미에의원실에 보냈음.

재개정안의 내용은 전자주민카드 관련조문을 완전히 삭제하고 주민등록법에 수록할 사항중에
호주, 민의사항을 삭제하는 것이었음. 추미에의원실은 이 재개정안을 기초로 행정자치부 신민지
들과 협의하여 재개정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안을 만드는데 합의하였음. 물론 이는
신부사관의 합의였고 행정자치부 내에서 행자부 차관은 여전히 이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기
리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임.

1. 추미에의원실에서 작성한 안은 국민회의 제1정책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정책조정위원회
에서 이루어진 약식(?) 당정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는 재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였으
며, 이같이 된 이상 정부의 입장을 무조건 배척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가진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남궁진위원의 입장에 따라 추미에의원실의 재개정안은 전폭지지를 받지는 못하였다 한.

1. 의견이 일치할 보지 못하자 정부와 두 여당은 12월 7일 재개정안 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당산

450-9000 9525

[메시지 끝임] 메일 내용

메일: INBOX 메시지 5/6

21%

보낸 시

간 : Tue, 28 Jul 1998 19:03:17 +0900

송 신 인 : gaetoe <gaetoe@member.sing-kr.org>

답장할사람 : idcard@mail.sing-kr.org

수 신 인 : sing.member@mail.sing-kr.org

참 조 인 : idcard@mail.sing-kr.org

제 목 : 전자주민카드 목요일 집회에 참석합니다

전자주민카드, 지금 행동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입니다

◆ 전자주민카드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미니 고속철 사업'이라 불릴 만큼 예산낭비와 졸속정책의 대명사인 전자주민카드,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이 위험한 제도가 다시 부활하려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대선과 새 정부 출범 이후,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백지화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대통령과 국민회의는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혔으며, 3명의 관계 공무원의 비리 사실까지 드러나는 등 이 사업의 문제점이 속속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구 내무부)의 몇몇 공무원들이 계속 완강한 집착을 보이며 거의 죽었던 전자주민카드를 다시 살려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이미 전자주민카드 관련 올해분 예산을 신청하였고 이를 심사하는 기획예산위에도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위는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나 행자부의 입김이 워낙 강력하여 결정내리기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긴급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기획예산위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예산까지 따낼 경우 전자주민카드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전자주민카드 완전 철회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전자주민카드 공대위는 전자주민카드 재추진 시도 분쇄와 완전한 백지화를 위해 지금 시급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 항의집회를 비롯한 행동을 전개합니다. 이 집회는 행자부 김정길 장관의 말바꾸기를 규탄하고, 전자주민카드 재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며, 대통령이 전자주민카드 철회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상황이 긴박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김정길 장관 규탄 및 전자주민카드 완전 철회를 위한 집회"
- ▶ 일 시 : 7월 30일 목요일 낮 12시
- ▶ 장 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뒤 동화은행 앞
- ▶ 순 서 : 경과 보고, 규탄 발언, 성명서 낭독, 등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메시지 끝임]100%[현재 메시지의 끝임]

30 2632 2244

보 도 자 료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과학부, 남양기자·사회단체
발 신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담당 : 홍석만(지식인인대 간사, 전화 : 778-4001, 팩스 : 778-4006)
제 목 전자주민카드 완전철회 촉구 시민결의대회 및 성명서 발표
날 짜 1998. 7. 30.(총 9쪽)

전자주민카드 재추진, 즉각 철회하라

1. 김영삼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던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지난 97년 정기국회때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근거를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률은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의 강력한 반대속에 신한국당 단독으로 의결되어 정당성이 미약하였습니다.

2. 이후 대통령선거때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반대하는 새정치국민회의와 당시 김대중후보가 집권에 성공함으로써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전자주민카드사업에 예산전용의 의심이 있다고 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사업중지를 결정하였으며, 감사원은 1998년 6월 27일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막대하나 중병간축효과가 없는 등 실효성이 없으므로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6월 초경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며, 기획예산위원회에 1999년도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5. 이미 20대 중점관리사업의 하나로 전자주민카드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던 기획예산위원회가 행정자치부의 예산신청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자, 행정자치부 차관이 직접 나서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기획예산위원회외에도 국회의 내부위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며 여전히 전자주민카드사업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6. 이에 공대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원치없는 임상변화를 규탄하며 행정자치부의 부리한 사업 재추진에 항의하기 위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래와 같이 시위를 진행한 예정이니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자료 : 성명서, 감사원 감사결과)

- 아 래 -

“김정길 장관 규탄 및 전자주민카드 완전철회촉구 시민결의대회”

- 일시 : 1998년 7월 30일(목) 낮 12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뒤 동화은행 앞
- 순서 : 진행경과보고, 규탄발언, 성명서 낭독

<별첨자료 1> 성명서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1997. 7. 30.

전자주민카드 재추진, 즉각 중단하라

행정자치부가 최근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을 진재로 기획예산위원회에 1999년도 예산을 신청하였다는 소식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이미 '미니 고속철'이라 불릴 정도로 그 사업의 타당성이 의문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적 요소 때문에 설교 도입되어서는 아니되는 제도임이 확인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 대통령과 여당은 물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문과 간사였던 현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도 집권전에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

예를 들면 1997년 12월 14일 대통령후보 제3차 TV토론에서 김대중후보는 3당 후보중 유일하게 전자주민카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중후보의 당선이후 구성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전자주민카드사업에 예산전용의 의심이 있다고 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사업중지를 결정하였다. 감사원은 1998년 6월 27일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막대하나 증명감축효과가 없는 등 실효성이 없으므로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하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자주민카드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알

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자치부가 단순히 관련 법률이 이미 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을 받아 내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약속위반일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새 정부에 의하여 구성된 각 부처에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대선당시 제시한 각종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김성길장관이 기존 보수관료들의 책임회피를 위한 반말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관료계 개혁

이에 공대위는 행정자치부의 전자주민카드 제추진 움직임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기존 보수관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득되어 입장을 변경한 김성길장관의 업무수행능력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주민카드문제>는 21세기적인 인권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통령과 국민외의의 집권신 약속에 관한 것이므로 단순한 정책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만약 현 정부도 구 정부와 아무런 차이없이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추진하려 한다면 현 정부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강력한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 나아가 전자주민카드사업의 제추진 움직임을 즉시 중단하지 않는다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전면적 시민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우리는 부디 이 어려운 시기에 이치임 비생산적인 문제로 다시 국력이 소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한~~진 포기하고 관련 법률의 새개정계획을 수립하라.
1. 행정자치부는 타당성없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부도하게 추진해 온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라.
1. 남북대치상황에서 부리하게 도입한 주민등록제도를 인권을 보호하는 형태로, 나아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형태로 개선하라.

1998년 7.30.

공중대표 김 진 군
김 창 국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 육일 12430 - 124

수 신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전자주민카드시행반대 등을 위한 공동대책위

접 수 일 자	1998. 6. 24.	접수번호	98 - 15
청구정보내용	전자주민카드사업 관련 감사결과 및 관련 판단자료일체 등		
공 개 내 용	전자주민카드사업관련 감사결과중 개인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권고사항 1건.		
부분공개사유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제외		
공 개 방 법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직접공개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시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본·출력 <input type="checkbox"/> 복제물 <input type="checkbox"/> 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div> <div> 우송공개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 <input type="checkbox"/> 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div> </div>		
공 개 일 시	1998. 7. 13.(월)	공개장소	감사원 민원상담실
수수료(A)	우편요금(B)	수수료감면액(C)	계(A+B+C)
1,500원	원	원	1,500원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통지합니다.

1988년 7월 10 일

감 사 원



권 고 사 항

번 호	11	중앙행정기관	행정자치부	관계기관	행정자치부 본부
-----	----	--------	-------	------	----------

제 목 : 주민등록증 경신방안 부적정

1. 내 용

1995. 3. 15. 현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로 경신하기 위한 주민등록증 경신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996. 5. 14.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에 있어

위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은 각 개별법령에 따라 발급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지문 등 7종의 기능을 하나의 전자카드에 수록한 『국민종합복지카드』를 도입하여 국민편의 및 행정능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시작된 사업이었으므로

가. 수록내용이 축소 조정되어 전자주민카드 도입 타당성이 떨어진 때에는 <별표> “주민등록증 경신방안 비교”와 같이 검토 가능한 제 대안을 비교하여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위·변조가 어렵고 또한 도입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카드(제작비 315억원 소요, 1매당 900원)도입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음에도

당초 수록대상인 7종 42개 기재항목이 1997. 12. 17. 주민등록법 및 인감증명법 개정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지문, 인감(선택) 등 4종 10개 기재 항목으로 축소되어

현 주민등록증 기재항목에 『세대사항』과 『인감』사항만 추가된 것으로 당초의 다기능 카드인 『국민종합복지카드』로서의 기능이 퇴색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대사항과 인감사항만 제외하면 주민카드 표면에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 있어 IC(Integrated Circuit)칩을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도 사업계획을 변경

하지 아니하고 있고

나. 소요사업비는 재발급비 등의 유지관리비, 전자주민카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이용장비의 설치비 및 민간부담 등 전체 관련비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주전산기 구입비 및 S/W개발비, 카드제작·발급비, 주민카드발급센터 구축비 등 일제경신에 소요되는 정부부담의 초기투자비 계2,675억원만을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동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2,675억원의 초기투자비외에 전자주민카드의 경신주기를 10년으로 볼 경우 분실자에 대한 재발급비 및 만17세가 되는 자에 대한 신규발급비 등 10년동안의 유지관리비 2,050억원, 환율인상(미화 1달러당 840원→1,300원)에 따른 추가부담액 153억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기, 주민카드열람기, 인감판독기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설치비 146억원 등 계 2,349억원 상당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부담 사업비가 계 5,0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는 열람기 및 판독기는 많이 설치할수록 민원인은 편리해지나 민간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어 열람기는 금융기관 등 전 사업체에 1~2대씩, 인감판독기는 100인 이상 사업체에 각각 1대씩만 설치하더라도 1,523억원 상당의 민간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총 소요비용은 6,547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다. 전자주민카드를 이용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의 발급 감축과 이에 따른 인력감축효과는 동 카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발급기, 열람기 등 이용장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제증명의 발급 및 이용관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기대치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연간 1억7천만통의 제증명 감축과 이에 따른 5,000여명의 인력이 감축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1)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증명 실적은 열람 39백만건(40%), 초본발급 10백만건(10%), 등본발급 48백만건(50%)등 계 97백만건으로서 그중 열람민원은 주로 제3사가 타인의 주민등록자료를 읍·면·동에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되어도 증명감축효과가 없고 등·

초본 발급민원은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On-Line원격지』 발급으로 인근 읍·면·동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 주민등록법(1997.12.17. 법률 제5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2의 규정에 따르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초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의 9의 규정에 따라 증명교부 대신 현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보다 정착·발전시키면 등·초본 발급민원의 대부분을 전산자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주민등록등·초본의 증명 감축을 위해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인정되고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주민카드에 의한 제증명의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기』를 민원인이 읍·면·동에 갈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설치하여야 하나 이 경우 설치비 및 장비의 유지관리·운영에 따른 세반문제점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고 발급기 대신 같은법 제17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주민카드 『열람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증명 기능이 미흡하여 관인이 날인된 증명 요구시 감축 효과가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열람기 설치에 따른 민간부담 문제 등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의 증명발급 감축효과는 당초 계획대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며

(2) 인감증명은 연평균 48백만건이 발급되고 있으나 『인감』은 재산권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 때문에 전자주민카드에 선택적으로 수록하는 것으로 규정한 결과 인감이 수록되지 아니한 주민카드는 증명의 감축효과가 전혀없고, 인감이 수록된 주민카드의 경우에도 인감증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인감판독기가 신고인감과 소지인감의 동일여부만을 판독할 수 있어 관인이 날인된 증명요구시 인감증명의 감축효과도 당초 계획대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3) 또한 전자주민카드로 제증명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제증명의 발급 및 민원서류의 접수를 타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고, 타기관을 경유하는 민원도 본인이 직접 경유기관 및 접수기관에 가야 하며, 특히 사인간의 부동산 매매시에도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양도자·양수자 모두 등기소에 가서 주민카드를 제시해야 하는 불편 등 그 운용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라. 전자주민카드는 하나의 카드에 세대원 전원을 수록한 결과 세대원의 출생·사망·결혼 및 주소 등의 변경시 전체 세대원의 주민카드를 모아서 함께 수록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원중 변경처리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동 카드로는 주민등록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읍·면·동에 가서 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 등 전자주민카드 발급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위 “가”항 내지 “라”항의 실시내용과 같이 다기능 신분증의 기능 상실, 소요사업비의 증가, 제증명감축효과의 불투명 등 많은 문제점과 이용상 불편이 예상되는데도

위 사업계획을 재검토·수정함이 없이 1998. 1. 14. 사업비만 당초 2,735억원에서 2,675억원으로 줄여 2000. 4월부터 전자주민카드를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2. 조치할 사항(권고)

추진중인 전자주민카드사업과 관련하여 수록사항이 축소되었는데도 소요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의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재검토하고 주민등록증 경신방안에 관하여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및 사회성 등을 고려하여 위·변조 방지기능이 우수하면서도 비용이 적게드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 요망된다.

<별표>

주민등록증 경신방안 비교

방안별	제 1 안 현행 종이증	제 2 안 사진인화방식	제 3 안 플라스틱카드	제 4 안 전자주민카드
제작방법	종이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인후 비닐을 접착 제작	종이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여 카메라로 촬영한 후 인화된 사진에 비닐을 접착 제작	비표 등 도안이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사진과 인적사항을 인쇄한후 홀로그램을 도포 제작	플라스틱카드 제작방식 + IC칩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수록 제작
정부부담 투자비	142억원 · 중 70억 (1매당 200원) · 장비 등 72억	337억원 · 중 245억 (1매당 700원) · 장비 등 92억	865억원 · 카드 315억 (1매당 900원) · 시설비 등 550억	2,974억원 · 카드 2,253억 (1매당 6,438원, 1,300원/\$) · 시설비 등 575억 · 발금기 등 146억
연간유지비	15억원 · 중 6억 · 경비 9억	31억원 · 중 21억 · 경비 10억	60억원 · 카드 27억 · 경비 33억	205억원 · 카드 155억 · 경비 50억
비 고	· 사진교체 등 위·변조 용이	· 제1안보다 위·변조 방지 개선 (사진인화) · 주소변경 정정가능	· 비표, 홀로그램 도포로 위·변조 곤란 · 민간부담 없음 · 주소변경 정정 가능	· 위·변조방지 기능 탁월 · 기능 다양 · 주소변경 등 정정가능

통합전자주민카드 공대위게시판(ICCARD) [841/786]
제목: [프라이버시]전자주민카드 보류...예산 5천억불구 실익없어
글쓴이: 김형준(smallake) 98.07.18 15:33:08 조회: 2

매일경제신문 98/07/16
전자주민카드 보류...예산 5천억불구 실익없어

<창조회> 정부는 올해 시범 실시한 뒤 2000년부터 본격 도입키로 했던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는 일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30대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해 집중경토한 과 예산소요가 최소한 당초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금액의 2배 가까운 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며 "비용에 비해 실익은 거의 없어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획예산위 뿐만아니라 예산청과 감사원 등에서도 전자주 카드제가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에 실익이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 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위는 전자주민카드 처리시스템 구축과정에서 행자부 실무공무 3명이 비리를 저지르기까지 해 문제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있다. 그러 나 실무부처인 행자부는 15일 오후에도 석영철 차관이 기획예산위를 방 문해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 예산소요 지나치다

전자주민카드는 83년 이후 15년이 경과된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면서 주 민등록증, 초본, 인감증명서 등 3개의 증명정보를 하나의 카드에 담도록 것이다.

당초엔 6개의 증명에서 42개 항목을 수록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정보유 출과 사생활침해, 과다한 예산소요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3개 증명, 11개 항목을 수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총사업비는 267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485억원이 주전산 기 구입과 소프트웨어개발, 카드구입 등에 사용됐고 앞으로 로 2190억 원이 더 들어가도록 계획이 잡혔다.

하지만 기획예산위는 행자부가 제시한 사업비엔 초기투자비만 들어가 있어 카드 재발급비를 비롯한 유지관리비를 포함하면 예산소요는 5024 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업체에서 열람기와 판독기를 추가설치할 때 정부가 보조하 금액까지 합하면 6547억원으로 당초예산의 2배를 훨씬넘는다. 이외에 도 보안대책비 등이 추가된다고 보면 사업비는 훨씬 늘어 7000억원에서 최고 1조원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되면서 '미니고속철'사업이란 별칭까지 어 있는 상태다.

◇ 비용에 비해 효과 적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초본, 인감증명서 3가지를 합한 정도론 행자 가 예상하는 만큼의 행정효율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 기획 예산위와 사원 등의 판단이다.

전자주민카드에 추가되는 것이라곤 세대사항과 인감에 불과한데다 세 사항을 빼면 주민카드 표면에 기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한 증명 드 기능을 하는 카드제를 구축하기 위해 당국은 1조원의 예산을 투입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에 의한 개인정보의 우려도 크다. 디지털화한 주민정보를 중앙에 집중관리하기 때문이다. 또 분산관리하는 경우보다 개인정보유출 문 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보안체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해커 등에 의한 정보유출과 시스템 파고가 일어나면 걸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우 려도 배제하지 못한다.

어느 나라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제지향의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한 예 가 없다. 때문에 세계 최초로 전자주민카드제를 실시하면 국제 인권단체 들로부터 인권의 사각지대로 비판받으며 국제신인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 등 행정업무가 줄어드는 데 따른 행정인력과 비 용감축 효과도 미미하다.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더라도 카드발 급인력과 주민등록사항 입력, 수정 등 관리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앙집중적인 전자주민카드제는 행자부 내부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계획과도 배치된다. 시군구를 전산망으로 연결하면서 중앙에서 정보를 집중통제하는 데 돈을 쓰는 것은 중복투자가 될 것이다.

주민정보를 중앙발급센터로 일원화하면 기존 시도의 전산본부는 그 기 능이 무용지물이 된다. 더욱이 지역정보화 기반과 위험분산기능 을 약화 시키는 역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사용상의 불편도 만만치 않다. 세대원의 출생, 사망, 결혼, 주소 등이 변 할 때 전체 세대원의 주민카드를 함께 경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민 원서류를 축근을 통해 대리접수하는 일도 불가능해진다.

> 대안은 무엇인가

기획예산위는 현행 주민등록증이 15년간이나 지속된 것이어서 식별이 어렵고 범죄에 이용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새로운 신분증으로 갱신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증 갱신을 앞당기되 플라스틱카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종이로 만든 주민증은 비용이 적게 들지만 위·변조 방지가 곤란하다. 하지만 플라스틱카드는 전자주민카드보다 비용이 저렴하게 들면서 위·변조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행자부가 운영하려는 주민카드발급센터는 해체하고 주민정보는 지자체에서 분산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전자주민카드제 시행을 위해 이미 들여온 슈퍼컴퓨터 5대, 카드제조·발급장비 5대 등을 교

기관과 전산망 관리기관 등으로 넘겨 주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출판이 끝났습니다.

(번호) 도움말(H.?) 위아래(LS,F,B) 다발(TDIR, TLS, TW) 검색(SI, SN, ST, SD)

원본게시판>>

3585:877 - 29

김기중 변호사님

회의자료

'98. 7. 3(금) 14:00

주민등록전산담당

1. 주민카드사업 추진(8월중 계획 시달)

- 주민카드 또는 플라스틱 카드의 결정 7월중
- 읍·면·동 화상정보자료(사진, 지문, 인감) 입력 - 금년 하반기
- 시·도 전자계산소에서 처리하던 주민자료 제공 업무
 - 중앙발급센터 처리 시험운영(금년 11월중)
 - '99년 1월부터 시·도, 시·군·구 주민자료 제공업무(조건검색 포함) 중앙발급센터로 일원화

1. 프로그램 보급 : '98. 7. 6일 전동 설치 완료

-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제도개선사항
 - 등·초본발급시 발급기관장명 상단에 기관 전화번호 자동 출력
 - 병역사항에 임관일자 추가 출력
- 자격면허 변경 작업
- 하사나막기용 프로그램(Window용)

전자주민카드 재추진, 즉각 중단하라!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B4-1	60

행정자치부가 최근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기획예산위원회에 1999년도 예산을 신청하였다는 소식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이미 '미니 고속철'이라 불릴 정도로 그 사업의 타당성이 의문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적 요소 때문에 결코 도입되어서는 아니되는 제도임이 확인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 대통령과 여당은 물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였던 현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도 집권전에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

예를 들면 1997년 12월 14일 대통령후보 제3차 TV토론에서 김대중후보는 3당 후보중 유일하게 전자주민카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중후보의 당선이후 구성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전자주민카드사업에 예산전용의 의심이 있다고 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사업중지를 결정하였다. 감사원은 1998년 6월 27일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막대하나 증명감축효과가 없는 등 실효성이 없으므로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하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자주민카드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자치부가 단순히 관련 법률이 이미 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을 받아 내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약속위반일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새 정부에 의하여 구성된 각 부처에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대선당시 제시한 각종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김정길장관이 기존 보수관료들의 책임회피를 위한 반발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공대위는 행정자치부의 전자주민카드 재추진 움직임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기존 보수관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설득되어 입장을 변경한 김정길장관의 업무수행능력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주민카드문제는 21세기적인 인권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통령과 국민회의의 집권전 약속에 관한 것이므로 단순한 정책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만약 현 정부도 구 정부와 아무런 차이없이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추진하려 한다면 현 정부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강력한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나아가 전자주민카드사업의 재추진 움직임을 즉시 중단하지 않는다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전면적 시민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우리는 부디 이 어려운 시기에 이처럼 비생산적인 문제로 다시 국력이 소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완전 포기하고 관련 법률의 재개정계획을 수립하라.
1. 행정자치부는 타당성없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해 온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라.
1. 남북대치상황에서 무리하게 도입한 주민등록제도를 인권을 보호하는 형태로, 나아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형태로 개선하라.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 진 균
김 창 국

전자주민카드 재추진이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합니다. '미니 고속철 사업'이란 별명이 붙을만큼 예산낭비가 심하고, 사생활 침해의 우려로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이 사업을 기어코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IMF 시대에 막대한 혈세와 외화를 낭비하면서 실익도 없는 사업을 추진한다니, 도대체 행정자치부가 제정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전자주민카드가 문제 많다는 건 행정자치부 빼고는 다 압니다

- 1997년 12월 14일 대통령후보 제3차 TV토론에서 김대중후보는 3당 후보중 유일하게 전자주민카드에 반대한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전자주민카드사업에 예산전용의 의심이 있다고 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사업중지를 결정하였으며,
- 감사원은 1998년 6월 27일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막대하나 증명감축효과가 없는 등 실효성이 없으므로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기획예산위는 전자주민카드 처리시스템 구축과정에서 행정부 공무원 3명이 비리를 저지르기까지 해 문제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획예산위 뿐만 아니라 예산청과 감사원 등에서도 전자주민카드가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에 실익이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매일경제신문 98년 7월 16일자

장관, 말 바꾸지 마시오!

이와 같이 전자주민카드 철회는 김대중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과 맺은 약속입니다.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로 있던 당시에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김 장관이 갑자기 전자주민카드를 재추진한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말까지 뒤집는 김정길 장관의 원칙없는 태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자주민카드는 즉각 완전 철회되어야 합니다

전자 개목걸이, 인간 바코드라고 불리는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정부와 대통령에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신의 말바꿈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타당성없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온 일부 공무원들을 징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전자주민카드라니, 이게 대체 말이 됩니까?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성숙한 시민, 정당한 법, 충실한 정부 (GOOD CITIZENSHIP, GOOD LAW, GOOD GOVERNMENT)



법률소비자연맹

CITIZENS' UNION FOR GOOD LAW & GOVERNMENT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3-11 (산우빌딩)

전화: (02)523 - 8760(대호) FAX: (02)585 - 9227~9

인권 자료실		
등록일	장부기호	이름
98 5/21	B4-1	52

법기단 자스터스 / 시민헌법학회 / 사법정의연구소 / 법률시민대학 / 대학생법생활동수원 / 불공정피해대책팀 / 인권변호사단 / 입법·사법감사단

성명서

국가안보와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전자신분증 사업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우리 법률소비자연맹 (Citizens' Union for Good Law & Government) 은 인 권보호와 법률정의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전문 사회단체로서, 감사원이 밝힌 행정자치부, 한국조폐공사, 한국전산원, 과천시 등에 대한 전면감사 방침에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며, 아울러 날치기 통과됐던 "주민등록법 및 인감증명법"의 전면 무효화를 강력히 촉구 한다.

내무부(현 행정자치부)는 지난 95년부터 산하에 주민카드추진기획단 이란 법적근거가 모호한 단체를 만들고 국민의료보험망, 국민연금망, 운전면허전산망, 주민등록전산망 등 국가의 기본적인 전산망을 한 곳으로 통합하고, 무려 42개 항목에 달하는 개인신상 정보를 수록하 는 전자주민증을 만들려는 음모를 세워 국민들 몰래 추진하여 왔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아 소지하고 다 녀야 하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갱신하여 전자카드(IC카드)화하는 사 업으로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면 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실행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전면허정보, 국민연금정보, 의료보험정보 등을 함께 수 록한다고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시행예산만 2천7백35억원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I-의 주청에 의하면 1조여원이 넘게 소요)이 드는 국가기간 사업으로 현대, LG, 삼성, 한화 등 참여 대기업과의 정경유착 의혹, 안기부 등 정보기관의 개입의혹

성숙한 시민, 정당한 법, 충실한 정부 (GOOD CITIZENSHIP, GOOD LAW, GOOD GOVERNMENT)

은 물론, 관련법의 개정이전에 국회를 기만하여 “주민등록증 갱신
비”란 명목으로 예산을 책정받아 4백82억원 (국비 3백04억원, 지방비 1백
78억원)을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전용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우리 연맹은 대한변호사협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
호사모임, 과천시민회의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민주화블위한교수
협의회, 과학기술노동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등을 비롯하여 20
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주민카드사업 추진계획의 발표시부터 줄
기차게 주민증의 전자카드화가 3천4백 만명에 달하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국가안보 및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국회의사당과 신한국당(현 한나라당)당사 앞에서의
철회시위 개최 등 가지 가지 방법으로 거듭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철
회와 기존 주민등록제도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여 왔다.

내무부는 이에, 국민들이 잘 모르면서 국민들을 위해 편리한 전자
주민카드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자주민카드의 수록항목을 최초
42개 항목에서 35개 항목으로 축소조정하였다가 다시 주민등록사항과
인감사항(선택)만을 수록한다는 전제하에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였으며, 이미 외국으로부터 발급기계를 도입하는 등 전
자주민증의 실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우리 연맹은 그동안 100여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세계 1
00여개국의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였던 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자주민카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었으며, 미국,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가 행정편의를 내세워 신분증의 전자카드화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더 큰 국익을 위하여 포기하고 말았다.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전산기술력이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우월하지만
전산정보유출을 우려하여 신분증을 전자카드화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 11월 17일 대통령선거 등 국정혼란기를 틈
타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추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안”과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민들을 또한번 경

성숙한 시민, 정당한 법, 충실한 정부 (GOOD CITIZENSHIP, GOOD LAW, GOOD GOVERNMENT)

악·분노케 하였다.

우리 연맹은 97년 8~9월 국회의원 2백99명 전원에게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였던 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찬성하는 의원은 한명도 없었으나, 이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된 것은 내무부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97년 11월에 무려 3백20억원의 예산을 집중투입하였다는 의혹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전국민이 반대하는 악법을 위한 「로비」는 언젠가는 그 진상이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 연맹은 주민등록법, 인감증명법 등 관련법의 통과이후에도 현대방송 (HBS)의 '갑론을박'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언론기관을 통해 계속하여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주력하였고, 이 악법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였다.

다행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시행을 잠정유보하고 있지만, 지금 4천 5백만 국민이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IMF 경제위기를 초래케 한 대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공직사회의 비리, 그리고 밀실행정의 표본으로서 그 진실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업이다.

우리 법률소비자연맹은 새정부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실체를 낱알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문책하여 진실을 은폐한 채 밀실에서 법적근거 없이 국가발전을 지해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법과 제도도 추진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길 바란다.

1998년 4월 1일

法律消費者聯盟

總裁 金大忍

참고

1. 동함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문제점과 그 철회운동에 자세히 알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연락 바랍니다. (전화번호 02-523-8760 <대표>)
2. 우리 연맹은 전자주민카드 철회를 주장하는 10가지 이유 등 많은 전자주민카드 철회운동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100여개국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제도 현황과 각 당 및 국회의원의 정책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발전과 전자신분증」(800쪽)의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속한 시민, 정당한 법, 충실한 정부 (GOOD CITIZENSHIP, GOOD LAW, GOOD GOVERNMENT)



법률소비자연맹(CUGL)과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원희(공동위) 시민들이 97년 7월 15일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에서 전자주민카드 반대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책(국가발전과 전자신분증)에는 김대중대통령후보의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반대한다"는 인터뷰 내용과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회의 정책위원회가 우리 법률소비자연맹의 정책질의에 대하여 공식 답변한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의 정책답변서와, 김대중대통령 당선직후에 각계지도자 688명(합계응과 가톨릭신부 124명, 박형국 외 개신교목사 243명, 김진균교수와 한재 49명, 최영도변호사의 법조계 263명)의 연명으로된 "김대중정부는 법률소비자연맹을 통하여 약속한 정책을 이행하라"는 선언문, 또한 102개국의 신분증제도의 현황과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책질의와 답변서등이 속해있어 수록되어 있으며, 각사회단체의 반대운동·성명서 등도 수록되어있다. <비매점>